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동해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4265
------------	------

제안연월일 : 2006. 4. 18.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3월과 4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 및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관측탐사선의 수로 측량 실시 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인 독도 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법적 침입을 통한 동해에서의 수로 측량 등 도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가 한·일 양국 간의 선린우호관계와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관측탐사선의 수로 측량 계획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 한·일 양국간의 신뢰 훼손 및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특히,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삽입 지시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일본 해양관측탐사선 수로 측량 실시 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은 물론 같은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회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뒤집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발전적 한일관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